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3) 5·18 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역할

세 기관 기록물 자료 공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불혹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올해가 진상규명의 적기(適期)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자 정점이다. 5·18은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민들과 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의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40년 전 독재에 맞서 싸운 '광주 정신'이 온갖 왜곡과 폄훼로 움츠려 있다. 이제 광주를 넘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약칭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약칭 5·18연구소),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약칭 기록관)은 5·18의 진상규명과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세 축을 담당하고 있다.

5·18연구자들은 40주년인 올해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세 기관의 자료 공개 및 협력과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념재단'은 5·18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계승 활동 등을 목표로 1994년 8월 30일 설립(초대이사장 조비오 신부)됐다.

당시 5·18에 대한 진실에 목마른 피해자들과 국민적 열망으로 국민성금과 5·18 관련 피해자들이 내놓은 보상금 등 3억 7000만원이 밑받침이 돼 재단이 꾸러졌다.

기념재단은 설립 후 5·18 진상규명 운동과 교육 및 장학 사업, 5·18정신 계승 활동 등을 추진해왔다.

이후 1998년 5월 광주시가 '(재)5·18기념재단 기본 재산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재단 활동에 버팀목이 됐다.

조례를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기념재단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기념재단이 매년 세계적 인권지도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광주인권상'은 2000년 시행 후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상으로 정착됐다.

'5·18 연구소'는 5·18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형태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6년 12월 전남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설립(초대 소장 송기숙 교수)된 뒤, 5월 관련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2005년 5월 용봉관 1층에 '전남대 5·18기념관'을 개관하고, 2012년 5월 연구소 리모델링을 거쳐 3층으로 이전·운영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5·18 관련 자료 발굴 및 재조명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한국의 민주주의, 동아시아와 제3세계의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으로까지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5·18연구소는 다양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출판과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5월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세 기관중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다.

2011년 5월 25일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등재기록물 및 기타 5·18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필요성에 2015년 5월 개관했다.

설립 이후 2015년 12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5·18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5·18을 알리기 위한 상설·기획 전시회를 비롯해 각종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 세 기관의 설립에는 '5월 정신'을 통합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5·18 단체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5월 단체들은 40년 전 태동한 '5월 정신'이 광주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인권의 모델로 진화하길



제28회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에 참가한 전남대, 서울대, 제주대 및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찾아 80년 당시의 기록물들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5월 정신 계승 목표

국민성금·피해자보상금 밑받침 설립

인권지도자·단체 '광주인권상' 정착

전남대 5·18 연구소

다양한 학술·연구사업 추진

체계적 정리·출판·자료연구

민주주의·인권까지 폭 넓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유네스코 등재 이후

체계적 보존 위해 2015년 5월 개관

기록물 발굴·상설전시회·토론회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세 기관들 모두 5·18 단체들의 요구에 응해 1980년 5월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 없이 활동해왔지만, 40주년인 올해 이 세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바로 올해가 5·18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이자 미래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계승해줄 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재단(총 3400여점), 5·18연구소(총 2만 904여점), 기록관(5만 1387여점) 등 세 기관은 각각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록물도 있고 겹치는 기록물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물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념재단은 아직 온라인 아카이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5·18연구소와 기록관은 온라인 아카이브는 마련돼 있으나 자료의 존재 유무만 검색되는 정도로, 원문을 볼 수 없거나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문상태가 아닌 내용만 한글문서로 작성돼 있는 상태라 출처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또한 기관별로 분류 기준이 다르고 수량을 파악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40주년을 맞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나섬에 따라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소장처와 관리처가 다른 세 기관의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공조가 절실하다는 게 모든 5·18연구자의 목소리다.

한 5·18연구자는 "세 기관에 어디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5·18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막상 알고 있다고 해도 기밀문서로라는 이유로 연구자들조차 볼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5·18연구자는 "5·18진상조사위가 4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자료를 가지고 있는 5·18기관들의 자료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념재단, 5·18연구소, 기록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기념재단 소장품 기록물 전시회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당시의 사진 필름과 언론기사, 일기 등을 전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nas@kwangju.co.kr

5월 진실·정의·회복 뒤 포용 처벌 넘어 용서·화해 뒤따라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누구는 신물이 난다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묘지와 기념관만으로 '그날'을 상징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불려나오는 사건이 5·18이다.

남북의 평화체제가 형성되어 빨갱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지역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5·18은 진행형일 것이다. 정치가 덮어버려도 사건의 저장소가 있는 한 5·18의 역사는 언제든 재조명된다. 전일 빌딩의 헬기기총소사 탄흔과 전두환의 당량거칠 같은 무모함이 반증이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도 5·18은 들끓었고 정점으로 국민적 예니지를 소진하고 있는 난장판 국회에서도 5·18은 요동쳤다. 5·18희생자를 광주의 금남로에서 조롱하는 일도 거들고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실차원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두환 일당을 사면해버린 특목한 후과다. 그리고 지원원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설의 왜곡을 재생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왜곡 소동을 벌인 것은 정략의 대상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봐야한다.

국가가 사실차원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절실한 까닭이다. 더 이상 5·18이 정략의 도구로 되 불려나오는 일을 없게 해야 한다.

한편 40여년의 '5월'이 이룬 사회적 성과는 우람하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 간의 전쟁을 거치고 군사독재 아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은 대한민국은 5·18의 환란을 거쳐 비로소 자신의 국가를 민주주의적 사회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여 권력교체가 가능한 정치문화를 만들었고 민중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제도화하였다.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은 80년 5월 27일의 새벽에서 시작한 민주화운동의 큰 전환이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는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것을 몇 번의 정권교체로 체득하였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과거정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각

과도 달아있다. 과거정산은 처벌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이행기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행기 정의의 바로 세우는 기본구조가 진실, 정의, 회복에 있고 우리는 이제 3가지 모두가 관통하는 제2의 과거정산과정에 돌입해있다.

5·18진상규명이 사실규명과 사건현장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 국민적 용서와 화해가 뒤따라야 할 이유이다.

오백과 참회는 용서와 회복의 도덕적 자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5·18진상규명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이 보복정의를 아니라 회복정의에 가 닿을 것이다. 그럴 때 2020년세대는 지역주의적 배타성과 정략적 왜곡을 퇴출시킨 '사람과 삶으로서의 5·18'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5·18진상규명의 과제는 총체적이다.

헌법적 가치로 규범화하고 국군의 이념을 국민의 군대로서 재정립하는 것, 그리고 민주와 대동, 나눔과 자치, 용기와 희생의 정신을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

불혹의 40년을 맞은 5·18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나와 너를 포괄하여 우리의 5·18일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응징과 처벌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위한 의연한 결기가 더 필요하겠다.

5·18 진상규명 과정이 치밀한 사실규명과 함께 진실의 의미를 포착한 포용의 너른 품을 펼칠 때 목격할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냉소와 외면보다 성찰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